

정보통신의 이용 관습

- ...이 논문은 한국통신학회가 주최한...○
- ...「정보통신심포지움」에서 진용욱 교...○
- ...수가 발표한 요지이다. <편집자註> ...○



진 용 욱
(경희대 교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주제의 한계 밖이므로 생략하거나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보화 사회의 당위성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장래 실현이 충분히 예측되는 미래 사회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정보화 사회의 구체적인 실현이나 전개 방법,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서둘러야 할 사항과 애로사항(bottleneck)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각양각색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의 정리된 견해가 있다

면 정보화 사회의 중심적 과제는 정보의 저장과 가공 처리에 관한 情報産業과 망을 형성하여 수송하는 通信産業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實體構造(infrastructure)라 지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회를 지탱할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할 수 있다 하겠다.

여기에서 실체구조란 그 실체나 형상이 충분히 형상화 될 수 있는 구조를 말하며 수레의 경우와 같이 밀고 당기는 사람(추진 기구나 人的構成)과 도로의 상태(산업구조 또는 사회구조)도 같은 범주의 구조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수레에 무엇을 실어야 하며(정보 이용), 어떠한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가(이용 주체)? 다시 말하면, 실체구조에 對應하는 非實體的 構造 즉 「對上構造(superstructure)의 문제」가 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가 요란하게 들려오면서도 大衆의 感覺에서 볼 때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수레의 형체는 보이지 않으면서 수레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논의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는 우리의 속담을 연상시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용자는 영문도 잘 모르는 상태이고, 이용할 조직은 미비되어 있는 채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체구조는 성숙되어 있지 않으며 대상구조도 허약한 상태라는 것이다.

◇ 問題의 提起

이러한 상황진단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정보화 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말하면 실체구조를 선행시키고 다음에 대상구조를 성숙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그 逆順을 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構造 實現 戰略上的 「先後 問題」로 볼 때는 理論上 後者가 이상적이지만 정보 이용의 관습이 낙후된 우리의 상황에서는 前者가 효율적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구조와 대상구조의 相互補完의 성격때문에 -마치 닭과 계란의 관계처럼- 절대적 판단기준은 없다.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양자를 조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정보화 사회 실현 전략은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예견되고 있다 하겠다. 왜냐하면 정보 이용 관습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가운데 컴퓨터, T-V의 보급과 통신망의 건설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산업 사회에서도 이들은 3대 중요 매체(media)요, 메시지(message)인 것만은 틀림없으며 정보화 사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실체구조가 되기때문에 이의 보급과 구조구축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의 건설을 전제할 때는 이들 세가지 매체의 「유기적 이용 관계」가 최대의 쟁점이 된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건설의 기본 전략은 이들 세가지 매체의 유기적 이용관계를 고려하는 데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유기적 이용관계는 고사하고 각 매체의 이용 상황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의 이용율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도 조만간 위협 수위에 직면하리라는 예측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전화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70年代의 最大 악몽」이었던 「慢性積滯」를 곧 벗어날 전망이지만 현재의 이용상태로 볼 때 회선별 이용도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화 공급이 증대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음성 이외의 새로운 정보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TV의 경우도 약 800만대가 보급되어 있지만 단순한 방송 수상이로서의 이용이외에는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보자원의 낭비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요창출을 끌어내지 못한데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며 수요창출의 부진은 정보통신의 이용관습의 낙후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 利用慣習의 落後性要因

우리나라 정보통신 이용 관습의 낙후성 요인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분석해 볼 수가 있다.

우선 정보개념의 미성숙을 들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보라는 말은 첩보라는 이미지가 강한 부정적 언어이며 정보량의 계량화 개념이 희박한 것도 정보화 사회 건설을 힘들게 하는 주된 애로 사항이다.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현상이지만, 컴퓨터 공포증(computer allergy)이라는 용어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도입에는 배타적 심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권한다툼(power game)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컴퓨터의 도입으로 기존 체제나 질서의 재편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득권 보호의 자기 방어 본능이 작용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정보 통신 체제의 도입을 가로막아 이용 관습에 익숙해지는 기회가 늦어지거나 지연시키게 된다. 실제로 국내 유수한 컴퓨터회사에서 자체 전산화가 늦어졌다든가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 전기통신부서와 전산 조직의 부서가 별도의 조직하에 운영되는 상황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한편, 전화 이용 관습을 볼 때 통화시간이 길다든지 전화로 용건을 해결하는 것은 큰 실례가 된다는 사회 관습이 있으며 四柱八字도 컴퓨터로 보면 더 정확하다고 인식되는 사회분위기는 역사적 유산과 정보통신 이용관습의 미숙에서 유래된 것이다.

◇ 落後性的의 克服

이와 같은 정보통신 이용 관습의 낙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의 정보통신이 안고 있는 최대

의 과제이다. 먼저 3대 매체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기능과 이용 관습의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전화의 기능에는 단순한 정보 소통이라는 목적이외에도 교통혼잡의 해결책이나 인구의 소산,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지만 앞에서 지적한 우리의 이용 관습으로는 이러한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

최근에 상당한 붐을 타고 있는 컴퓨터 보급에도 문제가 많다.

현재 국산 개인용 컴퓨터가 가지는 소프트웨어 메뉴의 부족 내지 제한, 互換性 결여, 高價라는 자체적 내부 모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용 관습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 된다. 특히 한글 소프트웨어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보급한다고 했을 때 정보 이용 관습으로 볼 때도 치명적인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상당기간 컴퓨터 이용의 보편화를 지연시키게 될 것이다. 그의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디오텍스(videotex)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TV의 시청 경향도 UHF와 같은 개별적이고 특별한 프로그램은 거의 빈사 지경에 놓여 있으며 VHF의 일반 TV에만 거의 쏠려있는 상황, 말하자면 「주요 정보 이용 기구」가 아닌 「연예 오락 기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16은 시보를 알리는 특수한 번호이며 다이알116만 돌리면 현재의 정확한 시각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대표적 사례라 평가 될만하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의 이면에는 실체구조와 대상구조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정보를 생산, 가공, 처리해서 대중에게 분배 이용케 할 수 있는 4가지 성질을 산업 측면에서 볼 때 완벽한 실체구조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대상구조면에서 볼 때 이용자에게는 부

잡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친숙성),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고(자유성), 값싸게(저렴성)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갖추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보 통신산업이 성공하려면 실체구조와 대상구조의 구비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될 때 수요는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체구조나 대상구조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도 정보 이용 관습의 전환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대중의 의식 수준의 전환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보화 사회 건설의 핵심적 문제이며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다.

◇ 몇가지의 提言

정보 이용 관습의 올바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몇가지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 情報通信센서스를 실시해야 한다

음성정보(전화), 영상정보(TV), 데이터정보(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정보매체에 대해 산업 실태와 수준, 이용 실태와 의식 구조 등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조사는 정책의 수립과 경영 전략 수립에 기본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 건설을 위한 준비의 가장 원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 情報通信교육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재교육(기존의 종사자), 전환교육(직업 전환자), 양성교육(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물론, 대중 교양교육 등 사회의 중대 변혁기에 있어서 교육훈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데이터 통신(주)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보 통신 교육원」의 예는 재교육·전환교육에 관한 좋은 착상이지만, 첨부한다면 정보 통신 교육의 여러가지 문제를 연구하는 기

능도 아울러 가졌으면 한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양성교육의 문제에 관한 획기적인 정책 수립이 되지 않으면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 情報通信協議會(가칭)의 設立이 요구된다
정보산업, 통신산업,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관청 인사들이 모여서 애로사항의 타개나, 기본 전략 수립 등의 문제를 협의 조정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기왕에 존재하는 협회·조합등 이익 대변의 기능을 벗어나서 정보화 사회를 준비하는 핵심적 모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 이용 관습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중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 情報通信 基本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정보 산업 육성법이나 전기통신 기본법등 기존 체제를 규정하는 법은 그대로 인정되다가오는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갖춘 법체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 교육, 사회, 문화, 관습의 변혁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예: 컴퓨터 범죄, 전자 이체에 따른 경제질서 변화 등)을 효과적으로 정리해 줄 법체계가 되어야 한다. 시급히 서둘러야 할 사항이다.

◎ 情報通信에 관한 弘報方法을 研究해야 한다.
여기에서 弘報라 함은 政府의 업적 PR 이나 情報通信 産業의 측면에서 볼 때 상품 판매 수단의 일부로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일반 大衆에서 情報通信 分野의 專門家에 이르기까지 情報通信과 情報化 社會의 올바른 知識을 제공하여 주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 그룹에게 理解를 求해야 하는 것이 先行되어야 한다. 이러한 理解는 곧바로 PR 전문 종사자들에게 전해진 후 일반 대중에게 전파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 물론 각 단계마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첨부한다면 弘報를 단순한 선전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교육의 한가지 방편, 이해계층의 확산, 사회구조 변혁에 대처하는 정보제공등의 개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情報通信 利用에 있어서 획기적 開放政策이 필요하다

망 이용의 개방, 전산센터의 24시간 개방등, 情報 이용에 관한한 과감한 開放政策이 필요하다. 특히 통신에 관한한 안보사항에 대한 제약 요소가 있기는 하나, 이를 극복할 문제의 연구와 함께 「이용 관습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개방정책은 절대 필수적이다.

◇ 結 語

지금까지 정보 통신의 이용 관습이라는 측면과 관련시켜 정보화 사회 건설의 기본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고 몇가지 대안을 제언하였다.

이 논의의 초점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뒤따른다는 평범한 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반대로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는 법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기반이 허약하고 정보통신 이용 관습이 낙후된 상황에서는 수요를 먼저 개발하여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60, 70년대 우리나라의 개발 전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혜택, 대출 편의 제공 등 항상 공급 측면만을 편애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온 결과 온실경제, 관주도형 범주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이제는 공급자 우선에서 수요자 선택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정보 통신 부문에서도 수요 개발의 측면에다가 정책 수립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요의 개발은 어떠한 세계 혜택이나 대출 편의의 제공보다도 가장 강력한 공급자 보호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수요 창출 유도정책」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정보화 사회건설이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인내있고 끈기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수요 창출의 최대 돌파구는 이용 관습의 낙후성의 탈피에서 찾아야 한다.

늘어나는 국민저축

이룩되는 물가안정